

중국에 다가오는 인구절벽 충격

- 뒤늦은 정책 대응으로 충격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전망 -

정철호 연구위원보, 동향분석센터 (chchung@posri.re.kr)

김창도 수석연구원, 동향분석센터 (jincd@posri.re.kr)

목차

1.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
2.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 과연 성과가 있을까
3. 인구 오너스 시대에 진입한 중국경제
4.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5. 국내 기업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향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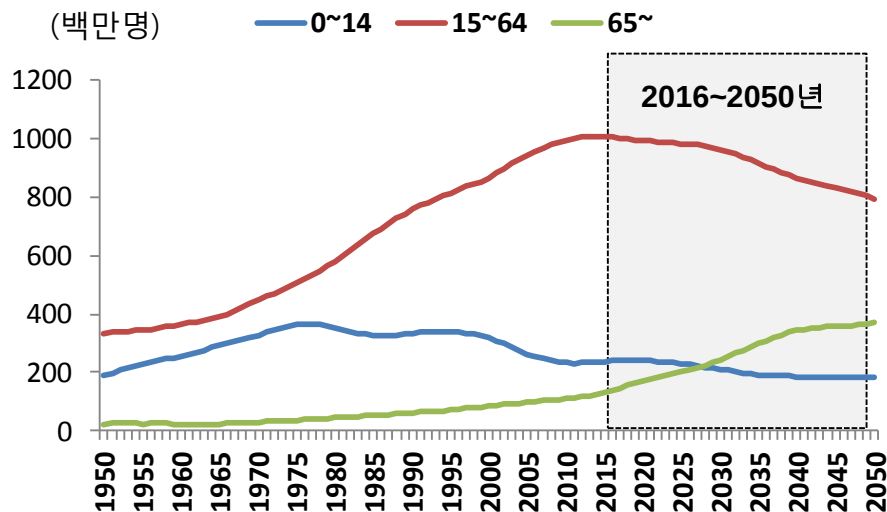
-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인 중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음
 -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1년부터 하락세를 보였으며, 2015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 UN 전망에 따르면 2022년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며, 2029년부터는 중국의 총인구 자체가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 정부가 뒤늦게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나섰으나, 가임연령여성 인구 감소, 경제적 부담 등으로 단기에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중국정부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2015년 공산당 18기 5중 전회에서 ‘전면적 2자녀 정책’ 시행을 발표하였음
 - 2016년 출생자 수는 전년비 7.9% 증가하였으나, 이 출생자들이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1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함
 - 가임연령여성 인구(15~49세)가 '15~'20년 중 2,800만 명 감소할 전망이며, 상당수 가정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둘째를 원치 않는다는 조사결과도 있음
 -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장기 프로젝트이며 향후 5~10년은 기반구축 단계로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아직 1인당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노후대비 부담 증가로 가계소비는 위축되는 한편,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구인난과 임금 급등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작용
 -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에 도달한 2015년의 1인당 소득은 U\$8,161으로서 미국, 한국, 일본 등에 비해 너무 일찍 조로현상에 직면
 -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양비율은 이미 2011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 노후대책이나 사회보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소비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한편 저임금 노동력인 농민공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노동자 평균임금이 두 자릿수로 상승하면서 중국의 제조업 생산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

-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건설 및 자동차 등 중국 제조업 둔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인구측면에서 바라본 철강소비 전망은 밝지 않음
 - 중국의 연령별 주택구매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25~44세가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자동차의 주력구매층도 25~44세로서 전체의 85.5%를 차지함
 - 그러나 25~44세 인구는 향후 계속 정체되는 반면, 55세 이상 인구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제조업 둔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중국의 철강소비 비중(worldsteel, 2015년)에 따르면 건설업이 57.3%, 자동차는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들로서는 중국시장에 대한 보수적 접근 및 노사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동북아 실버마켓 부상과 인구측면 유망 신흥국 사업 기회에도 주목 필요
 -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중국의 중장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중국시장에 대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함
 - 중국의 노사분규 증가 및 임금 급등, 농민공 구직난과 대졸자 취업난, 인력 고령화 등의 추세를 반영한 HR 관리가 요구됨
 - 중국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서 동시 진행 중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부상하고 있는 실버마켓 등 관련 사업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China+’ 전략으로서 인구전망에 기초한 유망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사업비중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對개도국 사업역량 강화가 중요
- 한편 고령화 선진국 경험 연구를 통해 미래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고령화 시대의 HR 제도 구축 및 사업 기회 발굴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고령화 사회(고령 인구 7% 이상)에서 고령사회(고령 인구 14% 이상)로 막 넘어가는 단계에 있으며, 일본·독일 등 앞서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 이상)로 진입한 국가들이 경험한 정책과 시행착오를 잘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본이나 독일 기업들이 앞서 고민했던 사업다각화 문제나 근로자 고령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 관련 연구를 통해 교훈점을 찾는 것이 필요함

1.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

-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인 중국에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음
- 중국의 총인구는 '15년 말 현재 13억 7,462만 명(국가통계국 통계)으로 여전히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중국정부가 1980년 도입한 산아제한 정책(1가구 1자녀 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
 -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2011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더니, 2015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 한편 유소년 인구(0~14세)는 1977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데 반해, 고령인구(65세 이상)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8년에 고령인구의 수가 유소년 인구의 수를 추월할 전망이다

〈그림 1〉 중국의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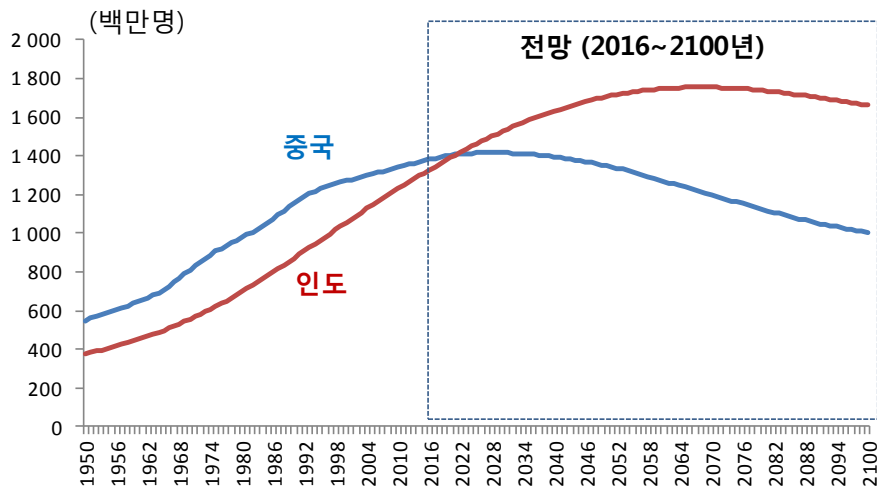
자료: UN, the 2015 Revision of World Population Prospects

주: 전망치는 Medium Fertility Variant 가정하의 전망치를 적용

- UN의 전망에 따르면 2022년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며, 2029년부터는 중국의 총인구 자체가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 UN의 중도적 전망에 따르면 2022년 인도가 인구 14억 1,868만 명으로 중국(14억 938만 명)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 인구대국의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임

- 같은 전망하에서 중국의 인구는 2028년에 정점(14억 1,639만 명)을 기록한 후 2029년부터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즉, 지금부터 불과 12년 뒤부터는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전망이다

〈그림 2〉 중국과 인도의 총인구 추이 및 전망



자료: UN, the 2015 Revision of World Population Prospects

주: 전망치는 Medium Fertility Variant 가정하의 전망치를 적용

2.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 과연 성과가 있을까?

□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1980년 중국정부가 도입한 ‘1가구 1자녀’ 정책이라는 산아제한 정책의 결과임

- 마오쩌둥 사후 중국의 최고권력자로 등장한 덩샤오핑은 너무 많은 인구는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1가구 1자녀’를 법제화하여 강력히 추진함
 - 이후 중국은 경제개발에 성공하면서 고속성장의 길을 걷게 되었으나, 산아제한 정책 시행 이후 30여 년이 경과하고 산아제한의 역풍이 인구절벽이란 형태로 불어닥치면서 중국경제의 앞날에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 중국정부는 2011년부터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였으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2015년에야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나섰음
 - 중국정부는 2011년에 ‘국가인구발전 12.5규획’을 발표하는 한편,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제한적 2자녀 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음

- 2013년 공산당 18기 3중 전회에서 ‘1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제한적 2자녀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15년에 개최된 18기 5중 전회에서 ‘전면적 2자녀 정책’ 시행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2015년은 이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해여서, 정부의 정책대응이 때늦은 감이 강함

[참고]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 추이

단계	시기	주요 특징	연도	주요 인구정책 내용
1단계	‘49~’53	출산장려, 인구성장 촉진	1953	- 위생부, “피임 및 인공유산법” 비준
2단계	‘54~’69	출산억제, 제약정책 완화	1955	- “인구 억제 문제에 관한 지시” 발표
			1962	- 국무원, “산아계획 제창에 관한 지시” 발표
			1964	- 각 직할시와 성에 산아제한위원회를 설치, 산아제한 기술 지도
			1966	- 문화대혁명으로 산아제한 정책 실시 무산, 인구정책의 부재 및 인구급증으로 농촌의 빈곤 상태 최악
3단계	‘70~’79	인구성장 억제, 산아제한 실시	1971	- “산아제한업무 처리를 위한 보고” 문서 전달
			1973	- 국무원, 산아제한 정책영도소조 설립, 결혼 늦게 및 자녀 2명 이하로 제한
			1978	- 중국 공산당 11기3중전회에서 산아제한 계획을 국가 정책으로 명시
4단계	‘80~’10	1자녀 정책 강력 실시	1980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부부가 1명의 자녀를 가질 것을 권장 - 새로운 “혼인법”을 통과, 부부의 1자녀 의무사항 명시
			1981	- “국가계획생육위원회” 설립
			1984	- 1.5 자녀 정책(농촌지역 첫째가 여아인 경우 둘째 출산 허용) 실시로 완화
			2007	- 고령화, 성비 불균형, 노동인구 감소 등의 문제에 대한 연구 착수
5단계	‘11~현재	전면적 2자녀 정책	2011	- “국가인구발전 12.5 계획” 발표, 제한적 2자녀 정책(부부중 한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 출산 허용) 시범적 실시
			2013	- 제18기 3중 전회에서 “1자녀 정책 폐기, ‘제한적 2자녀정책’ 실시
			2015	- 제18기 5중 전회에서 ‘전면적 2자녀 정책’ 시행 발표

자료: 각종 언론자료 POSRI 정리

○ 일단 2016년에는 출생자 수가 전년비 7.9%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장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중국의 2016년 출생자 수는 1,786만 명으로 2015년의 출생자 수(1,655만 명) 대비 131만 명이 증가(전년비 7.9%)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2000년 이래 16년 만의 연간 최대치이며, 특히 ‘2020년까지 중국에서 매년 1,700만~2,000만 명이 태어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2016년의 출생자 수 증가분(131만 명)은 정부의 당초 예상치인 300만 명에 크게 미달한 수치이며, 신생아가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되는 데에도 15년이 걸리므로 단기간에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가임연령여성 인구의 감소, 경제적 부담 증가 등도 정부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UN 통계에 따르면, 2015~2020년 기간 중 중국의 가임연령 여성(15~49세)이 2,8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가임연령 여성 한 명당 출산자 수가 변동이 없다면 매년 560만 명의 출생아 감소 요인이 됨
 - 또한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75%의 가정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둘째를 원치 않는다고 답변함
 - 한동안은 산아제한정책 때문에 ‘둘째를 원했어도 갖지 못했던 가정’이 출산을 늘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표 1〉 중국정부의 인구발전계획(2016~2030년)상의 인구관련 예측

영역	주요지표	단위	2015년	2020년	2030년
인구총량	전국총인구	억 명	13.75	14.2	14.5
	합계출산율	명	1.5-1.6	1.8	1.8
인구구조	출생인구성비		113.5	≤112	107
인구소질	기대수명	세	76.3	77.3	79
	노동연령인구	년	10.23	10.8	11.8
	평균교육연수				
인구분포	상주인구도시화율	%	56.1	60	70

자료: 국무원, 국가인구발전계획(2016-2030년)

-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장기 프로젝트이며 향후 5~10년은 기반구축단계로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중국정부는 2자녀 정책을 전면 실시하는 동시에 출산 장려금 지급, 출산 휴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보육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
 - 고령화에 대응해서는 정년연장(남 60→65세, 여 50→60세)을 2022년까지 시행하는 한편, 노인복지 시설 확충, 연금/보험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임

〈표 2〉 중국정부의 인구정책 대응 평가

(정책 성공 가능성) Low ○ ● ● ● High

부문	정책 대응	종합 평가
인구 감소	• 1자녀 정책 → 2자녀 정책 실시 • 출산 휴가 등 보육 인프라 개선 • 인구교육 향상(우수인력 확보) • 교육체계 개선, 중점 대학육성	- 출산 관련 정부 계획적으로 통제했으나 과잉 통제 - 출산 장려 관련 자금 마련 및 제도는 수립 중 - 단순 노동력 감소 대응보다 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고급 인력 양성 ☞ 중장기 과제로 단기 성과 어려움
고령화 문제	• 정년 연장, 노인 교육 강화 * 男 60세→65세로 연장 검토 • 노인 복지 시설 확충 • 연금/보험 제도 개선	- 정년 연장은 점진적/차별적으로 추진 전망 - 복지/연금/보험 등에 필요한 자원 마련 중 - 지방 및 기업 참여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중 ☞ 단기 성과 어려움, 장기 과제로 성공 불확실

자료: 각종 언론자료, POSRI 정리

3. 인구 오너스 시대¹에 진입한 중국경제

□ 인구 구조 변화는 저임금 노동력을 기초로 한 공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고성장을 지속해 온 중국경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동인임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더 루이스가 제시한 ‘루이스 전환점’의 개념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이 초기에 고성장을 보이다가 잉여노동력이 고갈되면서 임금 등 생산비용이 급등하고 성장률이 정체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겪게 됨

-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세 진입은 노동투입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의 직접적인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잠재성장률 추정식에 따라 노동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추산해 볼 수 있음. 즉 기간별 생산가능인구 증가율과 노동소득분배율을 곱한 것이 그 기간 중 노동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임
- 추산결과 2016~2020년 노동투입의 감소로 매년 0.2%의 성장률 하락 요인이 발생함(반면 '00~'05년에는 1.0%, '06~'10년에는 0.6%, '11~'15년에는 0.1%의 성장률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음)

〈그림 3〉 잠재성장률의 추정식과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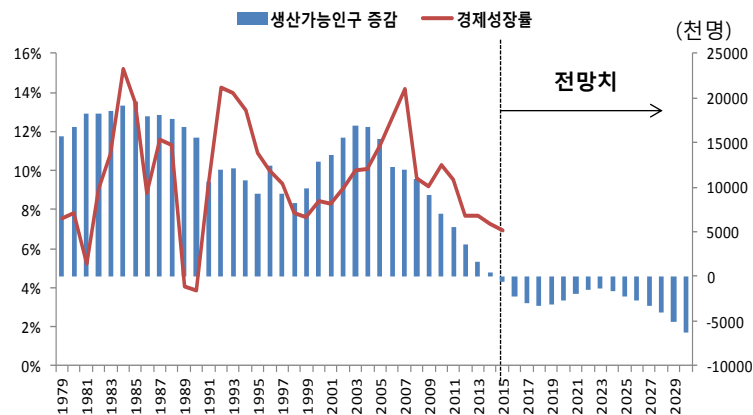


자료: POSRI

¹ 인구오너스란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년층은 늘어나는 시기를 말한다. 생산연령인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 인구로 변하게 되면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세는 둔화된다.

- 실제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생산가능인구 증감 추이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성장률이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우려됨

〈그림 4〉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생산가능인구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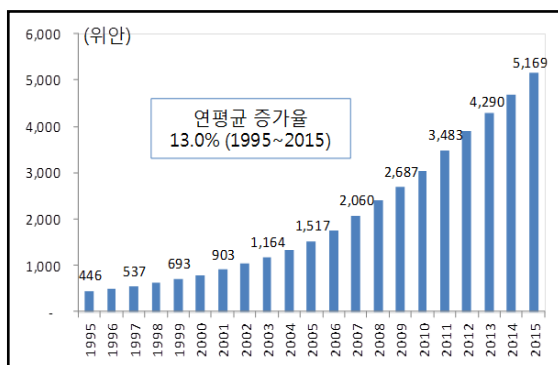
자료: UN, IMF

□ 특히 중국은 1인당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하면서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전망

- 중국은 2015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0%에 도달하였는데, 1인당 소득(U\$8,141)이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서 고령화를 맞게 되었음
 - 미국, 일본,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0%에 도달한 것은 각각 1972년, 1985년, 2008년이었는데 당시 1인당 GDP(2010년 미 달러 실질 가치)는 모두 U\$20,000을 상회(美 U\$24,760, 日 U\$29,550, 韓 U\$20,849)
 -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양로비·의료비가 증가하고 연금지급액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부담해야 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양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양비율은 이미 2011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노후 대비 부담 증가로 가계소비는 위축되는 한편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구인난'과 임금의 급등으로 제조업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약화될 전망이다
 - 노후대책이나 사회보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소비의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주 소비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의 감소는 부동산 및 내구재 소비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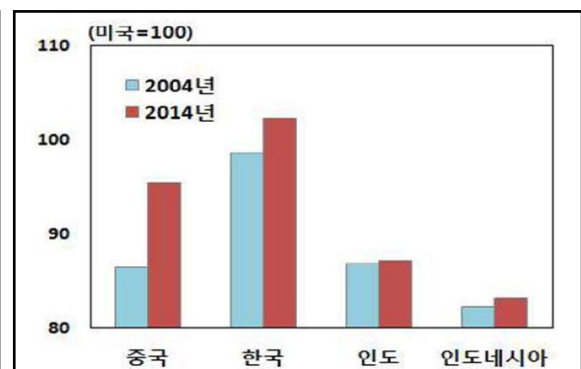
- 한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으며, 임금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의 농민공 증가율이 2010년만 해도 5.4%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5년에는 1.3%에 그쳤음
 - 한편 2008~2015년 기간 중 농민공의 월평균 임금 상승률은 12.6%의 급등세를 기록하였음
- 노동자 전체의 평균임금도 두 자릿수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제조업의 생산비용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임

<그림 5> 중국 근로자 월평균 임금 추이



자료: ILO, Global Wage Report 2016/2017

<그림 6> 주요국 제조업 생산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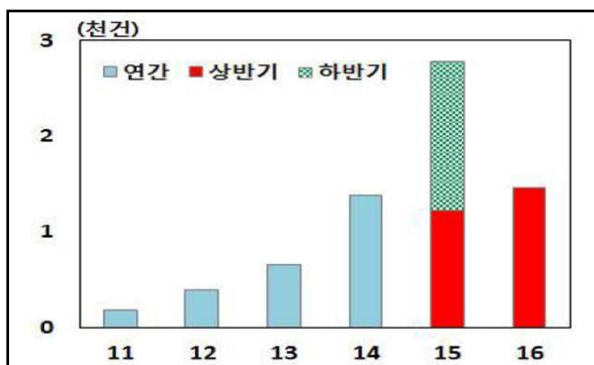


자료:BCG, 한국은행(2016.8)에서 재인용

○ 한편 노동자들의 권익의식 강화로 노동쟁의는 급증하고 있고, 대졸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은 심화되고 있어 사회불안이 커질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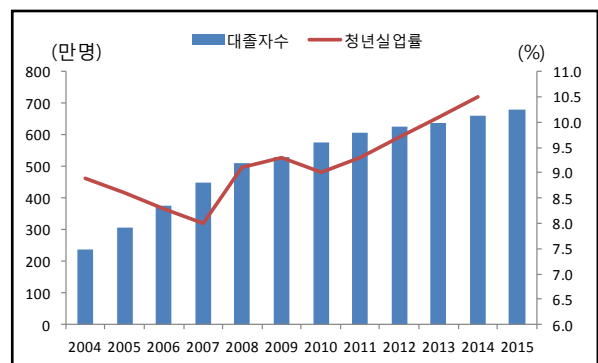
- 저임금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근로자들의 권익의식이 강화되면서 노동분쟁 건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대졸자가 2005년 306.8만 명에서 2015년 680.9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대졸자의 공급과잉으로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음(청년실업률이 2010년 9.0%에서 2015년에는 10.5%로 상승)

<그림 7> 중국 파업건수 추이



자료:중국勞工통신, 한국은행

<그림 8> 중국 대졸자 및 청년실업률 추이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4.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인구 구조 변화는 건설 및 자동차 등 중국 제조업 둔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중국지수연구원의 연령별 주택구매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25~34세가 전체 구매자의 약 50%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35~44세가 25%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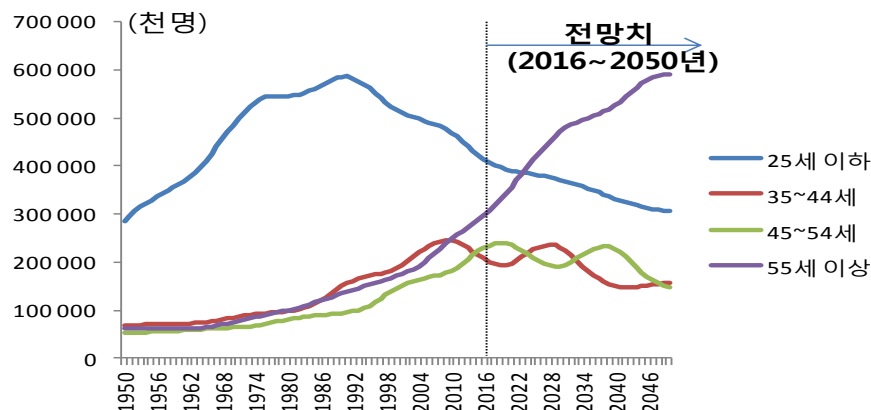
〈표 3〉 중국 연령별 주택 구매자 비중

	25세 이하	25~34세	35~44세	45~54세	55세 이상
주택구매자 비중	5%	49%	25%	14%	7%

자료: 중국지수연구원

- 그런데 향후 연령별 인구 전망을 살펴보면, 25~44세 인구는 일정 수준에서 계속 정체되는 반면, 55세 이상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9〉 중국 연령별 인구 추이 및 전망



자료: UN, the 2015 Revision of World Population Prospects

- 자동차도 주력구매계층은 25~45세로 나타나며, 향후 주력 구매계층 인구의 정체가 예상되므로 인구 측면에서는 수요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볼 수 있음

〈표 4〉 중국 연령별 자동차 구매 의향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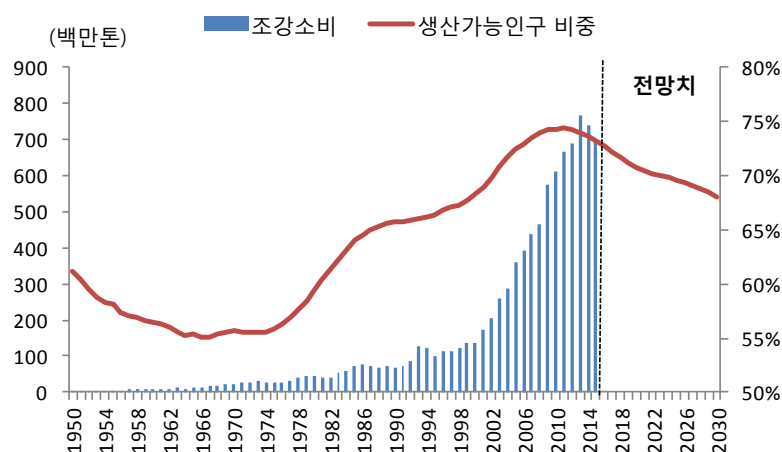
18세 이하	18~24세	25~30세	31~35세	36~45세	46세 이상
0%	9.1%	35.0%	26.3%	24.2%	5.4%

자료: 互联网消费调研中心(ZDC) & 汽车点评网(XGO)

- 중국의 철강소비 비중(worldsteel, 2015년 기준)을 살펴보면, 건설업이 무려 57.3%를 차지하고, 자동차는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가능인구와 철강소비의 관계를 보더라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철강소비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요인임
 - 철강(조강)소비와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2011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2015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이 감소 추세도 향후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 중국정부는 철강산업 13.5계획('16~'20년)에서 중국 철강소비가 '13년 7.6억 톤에서 '20년 6.5억~7.0억 톤 내외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바 있음

〈그림 10〉 중국 철강소비와 생산가능인구 비중 추이와 전망



자료: UN, worldsteel

- 한편 중국은 아직 인프라 수준 및 도시화 정도가 낮아 추가적인 개발 여지가 존재하나, 당면한 과잉부채·과잉능력 문제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의 인프라 수준은 G7국가들과 비교할 때 아직 낮은 상태이고, 도시화율 역시 한국,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태임
 - 중국의 도로 및 철도, 파이프라인 등 보급률은 G7 대비 9~24% 수준
 - 중국의 '15년 도시화율은 55.6%로 독일(75.3%), 미국(81.6%), 한국(82.5%), 일본(93.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음
 - 이러한 추가적인 개발 여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은 그 동안의 부채에 의존한 과도한 투자 중심 성장방식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내수 중심의 성장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확대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임

5. 국내기업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향

□ 중국의 인구 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중국의 중장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중국시장에 대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함

○ 향후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성장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또한 중국은 그 동안의 과잉부채에 기인한 과도한 투자 의존형 성장으로 산업 전반에 심각한 공급과잉을 겪고 있어 추가 자본투입도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중국이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유기업 개혁, 제조업 혁신 등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나 결코 쉽지 않은 작업으로 성공을 낙관하기도 어려움

- 또한 중국의 부채문제가 정부의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중국의 성장률이 상당히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를 감안한 보수적인 대중국 사업전략 및 시장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중국의 노사분규 증가 및 임금 급등, 농민공 구직난 및 대졸자 취업난, 인력 고령화 등의 추세를 반영한 HR 관리가 필요함

- 중국의 경우 특히 HR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제반 변화를 고려한 중국 현지인력 관리 강화가 필요함

- 노사분규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공회 관리 및 현지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현지직원의 몰입도 조사를 실시하여 불만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여 현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개최해 원가절감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노력도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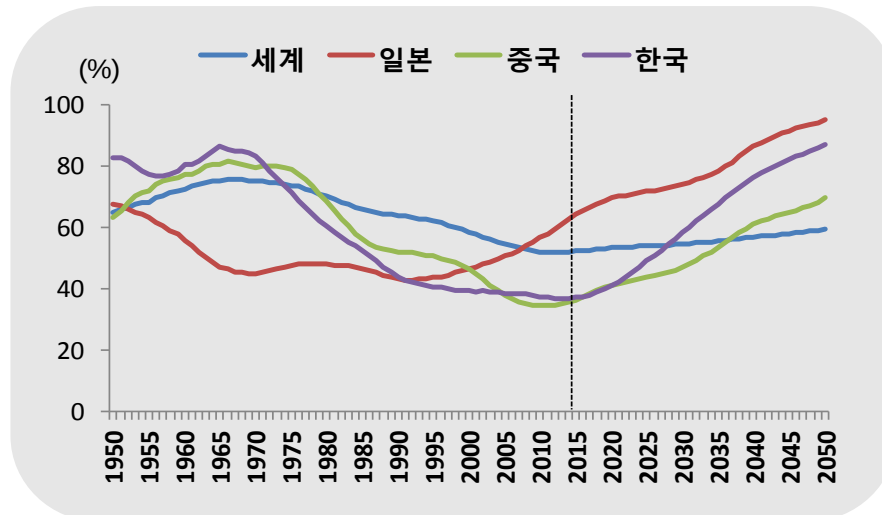
□ 중국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부상하고 있는 실버마켓 등 관련 사업 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 동북아 3국 모두 급속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를 겪고 있으므로, 이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세계 전체적으로도 고령화의 영향으로 총부양비율이 2010년을 저점으로 장기 상승추세를 보일 전망임

- 최근 삼성그룹은 이런 추세를 고려하여, IT와 의학·바이오통 융합한 스마트헬스 사업 등 의료 및 헬스케어 사업에서 미래 먹거리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음

〈그림 11〉 한·중·일 총부양비율 추이 및 전망



주: 총부양비율=(0~1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자료: UN, the 2015 Revision of World Population Prospects

- ‘China+’ 전략으로서 인구전망에 기초한 유망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사업 비중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對개도국 사업역량의 강화가 중요

- 국내 경제의 저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글로벌 사업의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중국의 대안으로서 인구전망이 밝은 유망 신흥국에 대한 사업비중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계 권역별 고령화 추이를 보더라도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등 선진국에 비해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월등히 낮음

〈표 5〉 세계 권역별 65세 인구 비율 비교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세계평균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17.6%	14.9%	11.9%	8.3%	7.6%	7.5%	3.5%

자료: UN, the 2015 Revision of World Population Prospects

- 다만, 개도국의 경우 사업환경이 열악하고 제도적인 후진성이 문제가 되므로

이러한 국가에서의 외국인비용²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고령화 선진국 경험 연구를 통해 한국의 미래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고령화 시대의 HR 제도 구축 및 사업기회 발굴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기준으로 7개국(일본,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핀란드, 불가리아)이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 국가임

- 한국은 고령화사회 단계에서 막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14%)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으며, 초고령사회 국가들이 경험한 여러 가지 정책과 시행착오를 잘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본이나 독일 기업들이 우리보다 앞서 고민했던 사업다각화 문제나 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제도적 대응(정년연장, 작업 안전, 건강문제 등) 관련 경험 연구를 통해 교훈점을 찾는 것이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6〉 세계 고령화 국가 현황 (2015년 기준)

지역	초고령사회 국가	고령사회 국가	고령화사회 국가
아시아	일본	홍콩	한국, 싱가포르, 중국, 태국, 북한, 스리랑카, 마카오
유럽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핀란드, 불가리아	스웨덴, 라트비아, 몰타,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체코, 스위스, 슬로바니아, 헝가리, 영국, 루마니아, 세르비아, 노르웨이, 폴란드, 보스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몬테네그로, 아일랜드, 알바니아, 터키,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몰도바,
미주	-	미국, 캐나다, 우루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쿠바,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브라질, 파나마, 바하마, 트리니다드토바고, 괌
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	
CIS	-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중동	-	-	이스라엘, 레바논, 키프로스,
아프리카	-	-	모리셔스, 튀니지

자료: UN, the 2015 Revision of World Population Prospects

주: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고령사회는 14%, 초고령사회는 20% 상회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² 외국인 비용(LOF: Liability of Foreignness)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현지기업에 비해 낮은 사업환경에 직면하여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하는 총체적인 비용 혹은 불이익을 지칭함

[참고자료]

[보고서/논문]

이봉걸·홍정화, “새로운 블루오션 중국 실버산업을 주목하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Vol. 13, No.71, 2014년 12월

정철호, “철강산업에 다가오는 인구절벽 충격 - 고령화 선진국 경험과 미래 인구전망을 중심으로”, POSRI 이슈리포트, 2016년 9월 1일자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중국 고용의 오늘과 내일: 3대 특징을 중심으로”, 2016년 8월

Cheol-Ho Chung, “The Demographic Cliff: How It Will Impact Asia’s Steel Demand”, *Asian Steel Watch*, Issue. 2, pp.66-77, 2016

ILO, Global Wage Report 2016/17

[서적]

Sven Kunisch, Stephan A. Boehm and Michael Boppel(editors), *From Grey to Silver - Managing the Demographic Change Successfully*, Springer, 2011

[홈페이지]

세계철강협회 (<http://www.worldsteel.org/>)

Baidu, “人口年龄结构变化对我国房地产市场需求的影响”
(<http://www.chyxx.com/industry/201610/458465.html>)

Baidu, “年龄分布:有汽车用户年龄较高_调研中心专项研究-中关村在线”
(<http://zdc.zol.com.cn/351/3517537.html>)

中国政府网, 国务院关于印发国家人口发展规划(2016—2030年)的通知, 国发〔2016〕87号
(<http://www.moh.gov.cn/bgt/gwywj2/201701/a6dd45cf1660432c91a9ada5e758a4a2.shtml>)

IMF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6/update/01/>)

UN, the 2015 Revision of World Population Prospects (<http://esa.un.org/unpd/wpp/>)

[언론]

강도원, “‘이재용 시대’ 삼성, 신사업 재판 판다”, 서울경제, 2016년 10월 24일자

최선욱, “지난해 중국 신생아 16년 만에 최대…‘두 자녀 정책’ 효과 봤나”, 중앙일보, 2017년 1월 23일자

Benjamin Hass, “China’s birth rate rises but falls short of government estimates”, *The Guardian*, 23 January 2017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jan/23/chinas-birth-rate-soars-after-relaxation-of-one-child-policy>)